

“새만금에 바이오단지 조성해야”

나인권 도의원, 도정질문서 “기업유치·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전북 바이오산업 파급효과 극대화”

새만금에 전북 바이오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바이오단지 조성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나인권(김제1) 의원은 지난 9일, 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국내의 바이오산업의 비약적 성장이 본격적인 바이오경제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해주며, 농생명수도를 꿈꾸는 전북이야말로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때가 왔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에 대한 국민 우려가 급증했고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 의원에 따르면 바이오산업 해외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연평균 7.7% 성장률을, 국내 시장규모는 연평



군 20.7%의 성장률로 해외보다 더 극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국내 매출 또한 2017년 10조1,000억원에서 2021년 21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발맞춰 전국 지자체들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송도바이오단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 의료기기 대기업을 중심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고, 판교·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와 홍릉 일대 의료산업 중심의 서울 수도권 바이오클러스터

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제약 의료기기 산업 첨단으로 복합단지로 국내 최대 바이오산단으로 거듭났고, 이밖에 화성, 천안, 안동의 바이오산단 등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퉀 바이오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반면에 새만금이 있는 전북은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미래 비전이나 계획조차 없다는 게 문제라고 나 의원은 꼬집으며, “농식품이나 미래산업, 새만금 부서 모두 새만금 바이오단지 조성에 손 놓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나 의원은 “전통적인 작물 위주 생산도 필요하지만, 기업유치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6년이면 본격적인 영농에 들어가는 새만금에 첨단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면 지금 서둘러도 늦을 수밖에 없지만 새만금개발청과 농식품부 모두 강 건너 불구경 식이라 자칫 타이밍을 놓치고 주도권도 뺏길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나인권 의원은 “전북도가 먼저 바이오단지 조성안을 내놓고 주도적으로 나서야만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물꼬를 틀 수 있다”면서 재배단지, 가공 및 연구개발 설비, 물류단지가 융복합된 새만금 바이오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을 특별자치도 특례로 반영해 새만금에 융복합 산업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 교통정책 ‘우수 평가’ 도민 교통지표는 ‘최하위’”

진형석 도의원 “도민 체감 가능토록 정책 개선 시급 도내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교통지표(교통약자 실태조사, 대중교통 만족도,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지수 등)에서 전북은 최하위 수준이지만 전북도의 정책은 우수 평가를 받아 현실과 동떨어진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군의 순위 역시 하위권이었으며,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 역시 14개 시군 중 E등급 1곳, D등급 4곳, C등급 4곳, B등급 3곳으로 나타나 역시 하위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2019년 6위, 2020년 7위로 하위에 머물러 있다가 2021년 급격히 순위가 상승해 2위를 기록했다.

다.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교육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혁신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관영 지사에게 전북 청소년 교통복지 실현과 교통안전 정책 개선 등을 서거석 교육감에게는 “등하교 교통비 지원 방안과 질 높은 학교급식 유지와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발표한 전라북도의 교통약자 복지수준,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지수 등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지표가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도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정책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9곳 중 2위를 차지해 도가 시행한 교통정책과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지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북은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또 2021년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별 만족도 조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북은 77.78점으로 경북(76.42), 충북(76.62) 울산(77.49) 다음으로 하위 4위권에 머물렀다.

이울러 전북도의 교통정책 수준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교육청 및 14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교통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거석 교육감에게도 중등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을 위해 전북도와 적극 협력할 것과 실행계획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교육감은 “공감한다”며 “보편적 학생복지 실현을 위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급격히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학교급식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학교급식비의 현실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고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안전과 위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영양교사를 적극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서거석 교육감에게도 중등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을 위해 전북도와 적극 협력할 것과 실행계획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서거석 교육감에게도 중등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을 위해 전북도와 적극 협력할 것과 실행계획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서거석 교육감에게도 중등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을 위해 전북도와 적극 협력할 것과 실행계획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 안호영 의원, 완주

수소산업 발전 의정 행보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완주군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8일 완주군을 찾은 국회수소경제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 관련 사업들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수소경제포럼 소속 8명의 의원은 정부 수소경제 정책의 핵심인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의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공동 현대차 동차 공장 등을 방문했다.

완주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호영 의원이 이날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완주 수소산업 전도사를 지망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안호영 의원은 전주·완주 수소사업도시 지정,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완주 유치 등을 주도하며 도내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역시 유혜대 완주군수와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을 일정에 초청하고 △대용량 고효율 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 등에 대한 여야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남원시의회, ‘징계의원 여부’

지금 등재한 조례 개정 중



남원시의회가 징계받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예비,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 개정 추진 중이다.

의회는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동환 의원 대표 발의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시의원이 구급 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와 예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지급이 모두 중단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 정지 처분을 받으면 징계결정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가 미지급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인 오동환 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바로 세우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이와 같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정되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

지난 10일 서울 명동대성당 고스트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 역사 헌법전문 수록 추진”

민주 박광은 원내대표 “원포인트 개헌되도록 국힘 합의 기대”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아 “국민이 만든 민주주의 역사를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내년 4월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도록 여당이 합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확고한 가치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의 헌정질서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6월 민주항쟁의 성취로 탄생했다”며 “민주



주의 위기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검찰·감사원을 장악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시민사회 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주신 권한과 책임으로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민주주의 역사의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내 의견

을 모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갖도록 국민투표법도 개정하겠다”며 “기본권 확대와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적 개헌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추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18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한 대국민 공약이었다”며 “약속한 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 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후화된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율”

황영석 도의원 “위생 등 문제… 도 차원 대책 시급”

아파트·병원·학교 등의 옥내급수관에 대한 의무 관리 규정이 없어 노후화된 위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김제1)은 지난 9일 제4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갱생, 교체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옥내급수관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가운데 건물 내에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을 말한다.



현행법과 시행령상 6㎡ 이상 초대형시설과 국가 설치한 5000㎡ 이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6㎡ 이하 시설은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건축물이 아니면 옥내급수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육이 2000년 이전 준공된 주택이나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은 노후화 및 부식,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 교체 등 관리가 절실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설치된지 15년 이상 지난 아연도강관과 동관의 경우 내부 부식이 심해 탁도나 색도, 철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영석 의원은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대상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사립병원·사립학교·어린이집 등의 일반 대형건축물이 포함된다”며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옥내급수관이 노후해도 세척 등 관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어 관리규정 개선이 시급하지만, 환경부의 대처는 미온적인 만큼 도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군산항 활성화·새만금 신항 상생 장기적 관점에서 항만공사 설립을”

강태창 도의원,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운영 개선 자치경찰제도 활성화 위한 적극 소통·지원 등도 촉구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지난 9일 도정질문과 관련 김관영 도지사에게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군산항의 고질적인 계획수심 확보 실패로 인해 임출항 선박들이 안전성과 정시성에서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7부두간 항만 배후도로 시설이 없어 대형 중장비 이동도 화물차 출입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군산항 물동량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부두 내의 아작장 부족으로 추가 물량 확대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점에서 전북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발전계 계원화하는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광역계정 사업 수가 너무 많고 지원대상이 아닌 시군에 기금을 지원하는 등 운영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0년간 3,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나눠먹기식 단기적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소통과 지원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 참여에 있어 일선 경찰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도내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4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재훈 기자